



KNSI 특별기획 제21-1호

18대 총선: 지역별 선거결과와 분석과 평가

김영태
(목포대학교 교수)

- I. 18대 총선: 지속성과 변화
- II. 지역주의 정당경쟁구조의 지속과 변화: 영남·호남·충청
- III. 수도권 변화와 지속
- IV. 주목받는 선거구들: 경기 고양에서 경남 사천까지
- V. 18대 총선의 지속성과 변화: 몇 가지 논의들

I. 18대 총선: 지속성과 변화

지난 4월 9일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획득하면서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고, 통합민주당은 81석을 얻는 데 그쳤다. 또한 보수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자유선진당은 18석을, 그리고 한나라당 공천탈락자들이 중심이 된 친박연대 역시 14석을 획득했다. 이에 반해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은 5석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으며, 또 다른 진보정당인 진보신당은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정당별 정당투표 득표율 역시 보수정당의 지지도 상승과 진보개혁정당의 지지도 약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38.3%, 민주당 7.1%, 민주노동당 13.0% 등 진보개혁정당이 60% 가까운 지지를 얻었던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25.2%, 민주노동당 5.7%, 창조한국당 3.8%, 진보신당 2.8% 등 진보개혁정당의 지지율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한나라당 35.8%, 자민련 2.8% 등을 얻었던 17대 총선에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37.5%, 자유선진당 6.9%, 친박연대 13.2% 등 보수정당은 60%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이다.

결국 이번 18대 총선은 한마디로 보수정당의 압승과 진보개혁정당의 참패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선거결과는 한국 정당경쟁구조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역시 역대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정당경쟁구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등 정당지지의 지역적 편차는 여전했다.

여기에서는 17대 선거결과와 비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당경쟁구조의 지속과 변화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한다.

II. 지역주의 정당경쟁구조의 지속과 변화: 영남·호남·충청

민주화이후 한국 정당의 경쟁구조는 익히 잘 알려져 있듯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은 압도적 지지를 얻고, 특정 정당은 경쟁구조에서 배제되는 지역주의적 구조를 보여 왔다. 이번 선거에서 역시 지역주의적 정당경쟁구조는 크게 사라지지 않았다.

먼저 지역구 선거 당선자를 기준으로 볼 때 호남지역의 경우 전체 31석 가운데 민주당이 25석을 차지한 가운데 나머지 6석은 모두 친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 무소속이 당선되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역시 한나라당 후보가 17개 지역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대부분 한나라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친박연대 4명과 무소속 6명이 당선되었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한나라당 29석, 친박연대 1석, 무소속 7석, 민주당 2석, 민노당 2석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4석과 2석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보수정당구조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충남지역은 자유선진당 13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 등을 획득했으며, 충북지역은 민주당 6석, 한나라당 1석, 자유선진당 1석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우리당 6석, 자민련 1석, 충북지역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8석 전석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여 지역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선진당의 강세가, 특히 대전·충남지역에서, 눈에 띈다.

다음으로 정당투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 호남지역의 경우 통합민주당이 광주 70.4%, 전북 64.3%, 전남 66.9% 등의 지지를 얻은 반면, 한나라당은 이들 지역에서 각각 5.9%, 9.3%, 6.4% 등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17대 총선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광주 31.1%와 51.6%, 전북 13.6%와 67.3%, 전남 33.8%와 46.7% 등을, 그리고 한나라당은 광주 1.8%, 전북 3.4%, 전남 2.9% 등의 지지를 얻은 것과 비교할 때 민주당에 대한 지지결집은 다소 약화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이 대구 46.6%, 경북 53.5%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친박연대가 각각 32.7%와 23.6%의 지지를 얻었으며, 민주당은 대구 4.9%, 경북 5.6%의 지지를 얻었다.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구 61.2%, 경북 58.3%,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대구 22.3%, 경북 23.0%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한나라당계에 지지도의 집중현상은 크게 강화되고, 민주당계의 지지도는 크게 약화되었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각각 부산 43.5%, 22.6%, 울산 42.9%, 18.7%, 경남 45.0%, 18.0% 등의 지지를 얻은 반면 민주당은 부산 12.7%, 울산 9.3%, 경남 10.5% 등에 머물렀다.

충청지역의 변화는 흥미롭다. 한나라당의 경우 17대 총선 당시 대전 24.3%, 충북 30.3%, 충남 21.2%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각각 24.8%, 34.0%, 27.1%의 지지를 얻어 커다란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대전 43.8%, 충북 44.7%, 충남 38.0% 등의 지지를 얻었던 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18.6%, 23.9%, 13.5% 등에 머물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유선진당은 대전 34.3%, 충북 13.7%, 충남 37.8% 등 17대 총선 당시 자민련의 정당지지율(각각 14.5%, 6.3%, 23.8%)을 훨씬 상회했다.

이처럼 지역구 당선자 분포에서만 아니라 정당투표에서 역시 지역주의적 정당체제의 연속성은 다시 확인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민주개혁세력’을 통합한 통합민주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은 약화된 반면, 한나라당 공천문제를 계기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로 분열한 보수세력은 영남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이번 선거 전반에서 나타나는 보수정당의 지지도 강화현상과 분리할 수 없으며, 17대 총선과 이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다만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흥미로운 점은 유사한 정치지향을 갖는 정당이 분열하는 경우 지역적 투표 결집 현상이 강한 지역에서는 총합적 지지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반대정당이 분명한 지역에서 지역정당이 분열될 경우 강세 지역정당에 대한 대안적 선택으로 또 다른 지역정당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높은 정당지지도를 기록한 지역이 어디인가에서도 확인된다. 양 진보정당의 통합 지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광주(11.9%), 울산(18.7%), 전남(11.7%), 경남(13.6%) 등이며 전북의 지지율도 9.9%이다.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이 강세를 보인 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호남지역인데, 진보개혁성향이 강한 이들 지역의 경우 민주당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대안으로 결국 진보정당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물론 같은 논리에서 후보자투표와 정당투표의 분할투표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영남,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친박연대가, 충청 지역에서는 자유선진연대가 대체 정당의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충청지역 선거결과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은 충북지역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23.7%로 급락 했지만, 지역구 의석은 전체 8석 가운데 6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는 점이다. 충청지역의 경우 현역 출마자가 대다수 당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현직자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Ⅲ. 수도권 변화와 지속

이번 18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수도권, 특히 서울이다. 수도권의 지역구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서울에서 40석(전체 48석)을 획득한 것을 비롯하여, 인천 9석(전체 12석), 경기 32석(전체 51석) 등 전체 111석 가운데 81석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서울 7석, 인천 2석, 경기 17석 등 2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체 109석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76석(서울 32석, 인천 9석, 경기 35석)을 차지하고, 한나라당이 33석(서울 16석, 인천 3석, 경기 14석)을 얻은 것과 크게 대조되는 결과이며, 이러한 수도권의 선거결과가 의회의 정당구도를 확연히 바꾸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의 지적처럼 수도권 가운데 서울지역의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곤란할 것 같다. 왜냐하면 각 당 후보의 지역구 득표율 평균을 살펴보면 민주당 후보 평균은 각각 서울 36.6%, 인천 34.4%, 경기 38.0%, 그리고 한나라당 후보 평균은 50.1%, 인천 47.2%, 경기 48.2%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서울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과 달리 경기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된 것은 박빙의 승부에서 나타난 1위대표제(단순다수제)의 제도적 효과가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이 서울 40.2%, 인천 39.7%, 경기 40.9%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각각 28.3%, 24.6%, 26.4%의 지지를 얻은 것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결국 수도권의 선거결과는 서울, 인천, 경기를 구분할 때 차별성보다 유사성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역구 선거결과에서 나타나는 보수정당의 강세와 진보개혁정당의 약세라는 변화는 간과할 수 없다. 이 점은 정당투표결과에서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데, 진보개혁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전체적으로 서울 40.8%, 인천 37.9%, 경기 38.8%의 지지를 얻은 반면, 보수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은 서울 55.5%, 인천 56.6%, 경기 5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서울 58.7%, 인천 50.2%, 경기 59.8%를, 그리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서울 38.8%, 인천 36.8%, 경기 37.4%를 얻은 것과 크게 대조된다.

한편 수도권 선거는 이처럼 보수정당의 우위현상과 함께 인물선거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 아주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현역이며, 현역이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 정치적 명망이 있거나 장관 등의 행정경험이 있는 명망가라는 점에서 확



인된다. 인물선거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이번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 선거를 ‘386의원’과 ‘운동권 의원’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이 출마한 선거구의 선거결과가 대부분 박빙이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지역은 이와 대비되는 결과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물적 요인보다 정당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주목받는 선거구들: 경기 고양에서 경남 사천까지

구조적 조건과 환경과는 상이한 선거결과로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는 지역구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된 경남 창원과 사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부산 사하율과 경남 김해, 그리고 비록 낙선했지만 진보신당 후보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과 경기 고양 덕양을, 그리고 창조한국당 후보가 당선된 서울 은평을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군소정당이나 배타적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거나 이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보인 것은 물론 인물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권영길, 강기갑, 노회찬, 심상정은 모두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었으며, 문국현 후보는 대선출마경험이 있는 창조한국당 대표이고, 조경태와 최철국은 현역의원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구의 선거구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즉 이들 지역의 경우 대부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의 후보가 민주당의 대안정당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매우 미미하면서 진보개혁세력의 표가 이들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남 창원과 사천은 민주당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으며, 은평의 경우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5.8%에 불과했고, 진보신당 후보가 낙선했던 노원과 덕양을의 민주당 후보지지도는 각각 16.3%와 11.5%였다. 또한 부산 사하와 김해의 민노당 후보 지지율은 각각 2.8%와 5.2%에 머물렀다.

특히 여기에서 울산 남구와 북구를 비롯하여 창원, 마산, 사천, 김해 등 경남과 부산 일부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민노당이 20%를 넘나드는 정당지지도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 상당수가 전통적으로 민주노동당이 강하고, 노동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계급투표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겠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역주의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한 거부감이 이들 정당을 대안정당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당분간은 양대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지역보다 양대 정당 가운데 어느 한 정당이 취약성을 보이는 지역에서 진보정당은 양대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V. 18대 총선의 지속성과 변화: 몇 가지 논의들

정당경쟁구조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18대 총선결과 역시 지역적 정당경쟁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이념적 정당구도라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진보개혁정당과 보수정당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지역적 특성이 강한 영남과 호남의 경우 각각 10% 정도 보수세력에 대한 지지증가가, 그리고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지지감소 있었던 반면, 수도권과 충청의 경우 지지변화는 20%에 육박한다. 지역주의가 세력구도의 역전현상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세력구도의 재편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구도의 재편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구도재편은 이번 총선에서가 아니라, 이미 지난 대선과 특히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당시 한나라당 시도지사 득표율은 55.2%였으며,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지율도 53.8%에 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각각 27.1%와 21.6%에 불과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수도권의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를 상당 정도 석권했다는 것도 익히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뉴타운 공약’에 관한 논의는 유의미하면서도 제한적이다. 즉 ‘뉴타운 공약’을 그 자체로만 보면 박빙의 경쟁에서 당락에는 중요하겠지만, 구조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뉴타운 공약’에 감추어진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뉴타운 공약’은 지역개발공약이며, 여기에는 지역개발을 자신의 이해와 등치시키는 유권자들의 태도가 감추어져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개발계획이 이미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부터 지역개발과 이를 통한 성장이익의 분배라는 관점이 우리 정치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선거는 그 연장선에 있다.

최근 정치권이 이를 의식한 듯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구 쟁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담론이 항상 한 사회를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이 지난 역사이며, 현재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진보개혁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담론적 논의를 포기할 때 그들은 역사의 뒤편길로 퇴장당할 수밖에 없다. 2006년 지방선거와 대선,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는 유권자들의 대안적 정당선택이 반드시 진보에서 보수로 혹은 보수에서 진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에서 보수로의 이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2008/05/06)

